

독일 사회의 난민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교육의 과제

홍 은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aporia@cu.ac.kr)



국문요약

망명과 이주는 현재 유럽의 국가적, 초국가적 정책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다. 유럽의 공적 담론은 주로 안보, 통합과 유럽의 가치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럽은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는 정책, 법안, 규정 등을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을 고찰하고,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주민 혐오 현상 및 강화된 난민제한정책을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의 예를 통해 논의하였다.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포용정책과 규제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 내에서 난민유입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조차도 내부에서 외국인 혐오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증하고 있다. 특별히 쾰른 성범죄 집단 사건을 계기로 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 담론과 달리, 본 논문은 난민 유입에 관한 독일 사회의 담론 내에서 망명과 이주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종주의를 사회 내부의 문제로 주목하고 있는 비판적 소수자의 관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은 난민과 이주에 관한 지배 담론에 내재한 인종주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제어 : 난민, 망명, 유럽, 독일, 인종주의, 교육

I. 서론

독일의 교육학자 클라프키(Wolfgang Klafki)가 언급한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핵심문제”로 오늘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현상으로서 이주와 망명을 꼽을 수 있다(Klafki 2007, 56). 전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난민의 숫자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망명 중이다. 전 세계 난민의 86%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 출신으로서 지구촌 남반구의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을 하고 있다.¹⁾ 다시 말해 전 세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난민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셈이다. 그러한 전 지구적 망명과 이주의 발생의 원인으로 자국에서의 분쟁이나 내전과 같은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안전한 곳을 찾아 자신의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환경재해, 기근, 자국의 농업과 산업의 착취 현실과 같은 경제적 환경으로 발생하는 극도의 빈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망명과 이주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망명과 이주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적절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유입에 대한 유럽(본 논문에서는 유럽 국가 중 난민에 대한 개방과 통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 사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다른 어떤 사회 주제도 난민 관련 테마만큼 독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 2015년 89만 명²⁾의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하였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1) 출처: <http://www.vop.co.kr/A00001039778.html> (검색일: 2016. 09. 02.).

2) 독일 내무장관 토마스 데미지에르(Thomas de Maizière)는 2016년 9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독일로 유입된 망명자 수가 110만 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적은 약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언론에

난민이었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약 28만 명의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주 현상은 독일 사회에 큰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유럽국가 내에서 난민유입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조차도 내부에서 외국인 혐오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3년 ‘유로화 반대’를 외치며 창당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이 ‘난민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2016년 지방선거에서 3개주 모두에서 선풍을 일으킨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독일대안당은 내년 연방의회 선거를 겨냥한 여론 조사에서도 이미 10%를 훌쩍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정대성 2016, 43-44). 이런 맥락에서 난민 주제를 둘러싼 담론은 주로 급증하는 난민 수에 주목하고 있지만, 독일 사회 내에 증가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선동 범죄와 혐오발언·죄”에 논의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³⁾

독일 사회에서 망명자와 난민들은 여전히 난민수용을 지지하고 활발한 인도적 활동을 펼치는 여러 사회단체의 연대와 자발적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일 사회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공포와 거부 그리고 노골적인 인종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사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정책 방향을 특징짓고 있다. 최근 유럽주변국가로의 다수의 난민 유입에 따라 유럽 연합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통제하는 “요새화 정책”을 펼치면서 난민과 외국인 제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이신화 2016, 89). 그러한 난민 정책 과정에서 유럽은 국경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강조하는 국민국가적 접근과, 전 유럽의 연대성에 입각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을 나누려는 유럽 공동체적 입장 간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고, 난민 정책과 관련하여 그러한 상반된 입장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으로의 난민 대량 유입 현상을 다루는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이 주로 어떠한 난민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난민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시홍 2016; 박선희 2016; 안병익 2016; 이병렬 외 2011; 이신화 2016; 최진우 2016). 이때 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난민 문제가 마치 유럽으로 망명하고 도피하는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럽 이주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연구자가 보기에 망명과 이주에 관한 공적 담론과 사회·학술적 논의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자들이 독일 난민정책과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중복 계산 등 초기 통계 수집 혼선으로 애초 추산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한다. 출처: <https://www.tagesschau.de/inland/maiziere-fluechtlinge-103.html> (검색일: 2016. 10. 15.).

3)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412 (검색일: 2016. 09. 04.).

거의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 상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 난민의 대량유입에 관한 담론에서 난민과 유럽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폐하고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유럽의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익을 얻고 있지만(가령, 북반구 사람들이 남반구 사람들의 생활환경 파괴와 저임금과 낮은 단가로 생산되는 대가로 값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득은 다시금 남반구 사람들의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삶의 조건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이것은 다시금 남반구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과 삶을 찾아 (유럽으로) 힘겹게 이주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현상을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지배 담론에 의해 침묵하고 주변화된 그들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타자에 대한 독일의 대응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선 1950년대 이후 독일 사회통합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독일 사회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는 극우 성향과 이주혐오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으로의 대량 난민 유입과 이주정책과 관련하여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세계적 맥락에서 인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새롭게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파악하고, 예컨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추방, 배제와 같은 비인간적 상황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교육은 개개인의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독일 사회의 난민 담론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독일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1950년대 경제발전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서독 정부는 한국과 이탈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과 외국인 노동자 모집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⁴⁾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1년 단위로 취업허가를 주고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손님노동자(Gastarbeiter)’ 제도를 만들었다. ‘손님노동자’라는

4) 2차 세계대전 후 1945부터 1998년까지 독일 이주역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일(2010) 참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한영빈 2015, 48). 독일사회는 1950년대 스스로를 노동이주로 비롯된 이민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이민국가로 아니다”라는 생각은 1980년대까지 독일 사회에 지배적이었다. 1973년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독일은 해외 노동자 모집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독일 사회 내에서 기존의 해외 노동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독일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애초의 독일의 의도 및 기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 재결합 형태로 독일에 머무르면서 1980년대 외국인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0년대 독일의 외국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주자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과 둘째, 비유럽국가의 이주자들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 셋째 1983년에 제정된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통해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1980년대 외국인 제한정책의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한영빈 2015, 49). 1989년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동포와 난민들이 대거 독일로 이주해왔고 이에 독일은 1990년 외국인법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독일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은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중 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9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서 독일은 뒤쳐진 IT 산업 경쟁력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적 상황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동질적이라고 스스로 간주한 독일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2000년에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gesetz)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은 그동안 독일이 고수했던 속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속지주의 원칙을 독일 시민권에 도입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 태생 외국인 자녀의 이중 국적도 허용되었다(그러나 23살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 외국인은 독일 시민권을 조건부의 형태로 획득할 수 있었다.

독일 사회의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민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했던 독일의 이민국가 부정과 결별하면서 2005년 이민법

5) IT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독일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을 5년간 2만 명 받아들이기로 하였지만,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2만 명의 인력을 채우지 못하였다(한영빈 2015, 51).

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눈에 띄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후원하는 통합코스가 신설되고 이주자들이 독일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 제도 등 기본적 지식교육인 ‘오리엔테이션’ 강좌와 ‘언어(독일어)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연방이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라는 기관을 신설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에 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한영빈 2015, 51). 2007년에는 국민통합계획이 마련됨으로써 독일정부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때 독일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국민통합계획은 “함께 살기 - 분명한 원칙들”을 토대로 통합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정책의 목적은 이주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개방하고 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 사회적 책임, 학문, 예술, 문화에서 그들의 참여를 자극하는 것이다”(정기섭 2009, 101). 2008년에는 독일 거주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시험이 실시되었다. 독일 시민권 획득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선 독일에 최소한 8년 거주하고 국가기본질서에 대한 질문 10개에 대한 답을 해야 하고, 독일어 필기시험을 치른 후 시험관과 구두시험을 본다. 또한 직업이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독일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주민을 독일 사회로 포용하려는 개방적인 정책과 법을 마련하였지만, 그러한 제도가 이주민들을 독일 사회로 단순히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 측면이 강하고, 이주민을 독일 사회의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려는 비인간적 경향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조직화된 통합 담론이 이주민들로 하여금 독일 사회의 언어, 정치, 제도를 습득하도록 하여, 이주민을 단순히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객체로 전락시킴으로써 통합교육의 주체로서 이주민의 권리와 자기결정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방이주난민청의 통제 하에서 수많은 교사와 교육 기관은 그러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교육적 권력과 선별의 도구”로서 통합코스는 실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포스트식민적 국가에서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며, 통합코스는 그러한 특정 집단과 개인을 문화적 재사회화와 정치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통합코스는 비유럽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이에 반해 연방정부에 살고 있는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자발성을 토대로 선거권을 지닌다는 것이다.⁶⁾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교육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다문화교육에 내재한 고정적인 문화 개념 이해를 비판하면서 형성된 “상호문화교육”이라는 용어와 이주민을

6) 출처: <https://heimatkunde.boell.de/2007/11/18/integration-kann-nicht-verordnet-werden-ohne-gleiche-rechte-und-selbstbestimmung-keine> (검색일: 2016. 09. 30.).

가리킬 때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에 내재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주민과 자국민(독일인)의 구분하기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이주배경을 지닌”이라는 단어에서조차도 그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 왜냐하면 “이주배경을 지닌”이라는 명칭 그 자체도 특정 개인을 이주 배경 없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타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상호문화교육”의 교육학적 구상과 “이주 배경을 지닌”이라는 용어는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외국인 교육학의 경우 이미 외국인을 결핍의 존재로, 상호문화교육의 경우 문화적 차이를 고정시킴으로써 문화 개념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amburger 2009; Mecheril 2004).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문화를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과 신인종주의의 현상으로 문화인종주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 교육학계 내에서 비판적 소수자들은 교육(학)이 독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 작용하는 인종주의적 사고방식과 행위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Ⅲ.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 환영과 거부 사이에서

그리스 재정위기, EU국가 내 우파의 득세와 좌파 포퓰리즘 등의 국내정치문제, 러시아와의 갈등과 IS 및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위협 등 급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다수 EU국가는 인도적 구제보다 국경통제를 통한 자국의 사회 안정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EU국가들은 첫 유입국에서만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규약을 근거로 난민수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독일의 경우, 2015년 8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량 난민 유입을 유럽 전체의 연대책임으로 규정하고 공평한 책임분담을 강조하면서 첫 유입국에 관계없이 독일 전체 인구의 1%가량인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정부도 긍정적으로 난민에 대한 책임공유를 고려하였지만, 여타 유럽 국가들은 난민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6월 영국은 4만 명 달하는 남유럽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난민쿼터제 관련 제안을 거절하였고,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독일과 대조되어 비판받았다(이신화 2016, 90).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포용정책과 규제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난민들이 인접국뿐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유럽행을 강행하면서 독일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적극 환영하고 수용했던 모습은 개방적이고 열린 독일 사회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긴 여정에 지쳐 도착한 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음식과 생필품을 보내면서 활발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접할 수 있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과감한 난민포용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귀감이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터키 등지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독일행을 위해 유럽 진입을 시도하여, 정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7천여 명의 난민이 몰려들어 헝가리 정부는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난민법을 강화하였고, 그리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닫는 등 난민유입을 통제하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2015년 9월 초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동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도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체코 총리는 수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이신화 2016, 90).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쿼터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독일 내 여론도 반이민 정서와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극우정당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난민수용 거부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다. 독일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EU의 역내로 진입한 난민도 독일 내에서 난민신청을 허용하는 난민환대정책을 펼쳤다(박선희 2016, 42). 그러나 그러한 관대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메르켈 총리는 난민 수용 방침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더블린 규약의 재적용을 선언하면서 난민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박선희 2016, 42).

망명과 이주의 주제는 그때그때 국가적 망명과 이민정책의 제도적 구조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독일 사회학자 쉐르(Albert Scherr)는 망명 주제는 망명권리의 규정과 망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⁷⁾ 이런 점에서 누구를 ‘난민’으로 간주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중요한 법적, 정치적 규정과정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제네바 난민협약(Genfer Flüchtlingskonvention)에 의하면 정치망명권자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정은 거주 요구와 강제 추방의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이주민 혹은 경제난민의 범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호의

7) 출처: <http://fluechtlingsforschung.net/wer-ist-ein-fluechtling/> (검색일: 2016. 10. 07.).

8)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 GG)은 제16a조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의 망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제1항).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인권 및 기본권의 보호협약이 적용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안성경 외 2013, 137).

필요가 부정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약 1만 명의 사람들은 독일에서 강제 추방되고 있다.⁹⁾ 난민개념에 대한 정치적, 법적 담론은 처음부터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독일은 난민정책의 가장 변화가 있었던 1993년에, 난민지위를 규정하는 난민기본법의 §16a조항을 개정하고 시행하면서 ‘안전한 출신국’과 ‘안전한 제3국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¹⁰⁾ 그간 안전한 국가로 분류하지 않았던 국가를 ‘안전한 출신국’ 명단에 추가해서(예를 들어 몬테네그로, 알바니엔, 코소보) 난민 자격을 허용해주지 않던 출신국 범위를 확대하였고, 자국내 입국한 난민을 쉽게 추방¹¹⁾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¹²⁾ ‘안전한 제3국가’이라는 말은 유럽연합 국가나 노르웨이와 스위스와 같은 제3의 안전한 국가에서 난민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난민 신청 절차는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¹³⁾

이 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망명자와 난민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 난민보호와 지위 신청의 국가적 승인을 제한한다는 점과 둘째, 난민을 사회적 참여기회와 관련하여 강제적 공동숙박, 소위 일정한 지역에만 거주해야 하는 거주 의무(Residenzpflicht), 노동금지 혹은 노동시장으로의 부차적인 접근기회와 같은 특별 조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¹⁴⁾ 비록 19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예외규정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 사이에 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노동 권리적 엄격함도 풀어졌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난민의 일시적 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폐쇄적 난민유입을 허용했었는데, 2015년 갑자기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난민패킷 I과 2016년의 ‘난민패킷 II’로 불리는 개정을 단행하였다는 것이 있다.¹⁵⁾ 주요 내용은 ‘안전한 출신국’으로 판별되지 않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인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들의 입국을 대폭 허용한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만이 독일에 입국할 수 없으므로

9) 출처: <http://fluechtlingsforschung.net/wer-ist-ein-fluechtling/> (검색일: 2016. 10. 07.).

10) “안전한 제3국가”와 “안전한 출신국가”라는 말은 1990년 체결된 더블린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1992년 EU의 런던 결의안(London Resolution)에서 유럽이 난민을 유럽역외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박선희 2016, 44).

11)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주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송의 의미보다 추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2) 출처: <https://www.proasyl.de/hintergrund/asylpaket-i-in-kraft-ueberblick-ueber-die-ab-heute-geltenden-asylrechtlichen-aenderungen/> (검색일: 2016. 10. 09.).

13)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Sicherer_Herkunftsstaat (검색일: 2016. 10. 12.).

14) 출처: <https://www.proasyl.de/hintergrund/asylpaket-i-in-kraft-ueberblick-ueber-die-ab-heute-geltenden-asylrechtlichen-aenderungen/> (검색일: 2016. 10. 14.).

15)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70> (검색일: 2016. 10. 15.).

부모들과 동반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호자이자 난민으로서 위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민들의 독일 입국이 용이해진 반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최저생계비의 40%가 감소되었다. 또한 2016년 2월 연방내각에서 처리된 ‘난민패킷II’는 난민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 동반을 제한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들을 가능한 빨리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고, 학생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도 강화시켰다. 난민들에게 사회통합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독일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언어와 규범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유럽과 독일의 망명정책은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¹⁷⁾ 다른 한편으로 불법 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난민 문제를 다른 유럽 국가들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Hügel 2000, 156). 다음 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을 작년 쾰른에서 발생한 성범죄 집단 사건을 둘러싼 담론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여기서 특별히 쾰른 성범죄 집단 사건을 다루는 까닭은 첫째, 유럽 내에서 비교적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쳐온 독일이 쾰른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종주의와 이민 정서가 사회 내부에서 뚜렷이 나타났고, 이러한 강화하고 있는 이민혐오 현상은 앞서 언급한 2016년의 난민 패킷 II와 같은 더 엄격한 난민규정을 결정한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자는 이 사건에 대한 독일 대응방식에서 억압을 비판하고 평등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성차별주의조차 자신도 모르게 난민 담론의 인종주의에 연루하고 있는 현상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IV. 인종주의 비판적 관점에서 본 난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쾰른 성범죄 집단 사건의 예를 중심으로

2015년 110만 명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서 지난 연말 쾰른에서 발생한 이민자 집단

16) 출처: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6-02/asylpaket-ii-abschiebungen-familiennachzug> (검색일: 2016. 10. 15.).

17) 물론 독일이 최근 100만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유럽 국가들 중 유일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대량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송환하려는 유럽 정부 난민 정책의 ‘국가 이성 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그러한 독일 정부 난민 정책의 인도적 차원에 난민유입을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정책과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난민 관련 여론을 악화시켰고, 반이민정서와 이주혐오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난민수용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극우 세력에 맞서,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독일 내에서 극우파들 및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대하는 독일정당, 노동조합, 문화단체 등에서 이끄는 집회에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참석하여 난민 포용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권적 관점에서 난민 관련 문제에 접근하는 가운데, 독일로 유입하는 난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100만 명의 난민 중 극히 일부의 소행이었으나, '난민', '북아프리카와 아랍계 출신 난민 남성'이라는 표기를 부각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심화시키고 있다.¹⁸⁾ 이러한 비판적 소수자들은 끔직한 성폭력 사건을 악용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퍼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¹⁹⁾

영동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2015년 독일의 새해맞이 행사는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성에 대한 일상적 성적 폭력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독일 여론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와 복잡한 사회적 배경을 연관시키기보다, 연구자가 보기에 주로 쾰른 집단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출신국가를 보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쾰른에서 매우 다양한 집단에 의해 실제로 범해진 성적 폭력 사건을 둘러싼 담론은 주로 가해자의 성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 말하기보다, 독일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머물러야만 하는 타자의 문화, 종교, 교육의 부족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민족적, 문화적 출신과 소속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언뜻 단순히 보이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인 남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예를 들어 불법 이민,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미 출신국이 된 국가 내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주변화의 경험, 소득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이 범죄와 폭력의 연속에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로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남성다움'의 환상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에 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문화적, 민족적 출신에 주목하기보다 이 사건의 발생 배경을 파악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단순히 분노와 혐오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하는

18) 독일 연방 경찰 자료를 인용한 독일 주간지사 슈피겔에서는 실제로 난민 유입 증가 속도로 견주었을 때 이민자 범죄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fluechtlingskrise-bka-stellt-steigende-kriminalitaet-fest-vor-allem-von-rechts-a-1062661.html> (검색일: 2016. 10. 15.).

19) 출처: <http://beautinaru.tistory.com/36> (검색일: 2016. 10. 15.).

것은 자칫 독일민족 공동체의 ‘순수한 혈통’을 선언하고 독일 시민들에게서 반항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그러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혐오발언은 다른 인종, 민족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독일이 망명과 이주로 인해 이미 오염되었다고 망상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 내 비판적 소수자들은 쾰른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담론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펼쳐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특정 속성으로서 비합리성이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낯선 남자, 동양 남자에 귀속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되는 남성은 유럽인의 ‘내가 아닌 것’으로 투영되고 야만적이고 야수적인 오리엔탈적 남성으로 타자화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인과 동양 남자의 구분하기의 사회적 실천에는 차이에 대한 자신의 거부와 분노 혹은 호기심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유명한 문화학자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인 영국인은 흑인을 싫어해서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흑인이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이다”(Mecheril 2012, 18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일 사회 내에 쾰른 성범죄 집단 사건을 보다 세부화하고 정리하여 접근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주류 사회의 공적 담론이 난민유입의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난민위기”, “난민사태”, “난민처리”(강유덕 2016)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난민’에게만 초점을 두는 작금의 상황에서, 연구자는 망명과 도피와 관련한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비판적 소수자의 관점 또한 독일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비판적 여성운동가들은 “예외 없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페미니즘의 사안을 인종차별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조레크(Anne Wizorek)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적 폭력과 인종주의에 반대하여”라는 구호를 외쳤다.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은 1990년 이래로 페미니즘이 가정하고 있는 “여성”의 범주를 더 이상 동질적인 ‘우리’라는 범주로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페미니즘 안에 작용하고 있는 지배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을 자기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녀들은 쾰른 성범죄 사건에 직면하여, “성적 폭력은 가해자가 소위 ‘타자’, 즉 극우파들이 순수한 독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무슬림, 아랍, 흑인 혹은 북아프리카계 남성에만 국한시켜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성찰적 목소리는 독일 주류 여론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20) 출처: <http://ausnahmslos.org/> (검색일: 2016. 10. 08.).

실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유럽 난민에 관한 한국 언론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V. 독일 사회의 난민 담론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

망명과 이주는 현재 유럽의 국가적, 초국가적 정책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다. 유럽의 공적 담론은 주로 안보, 통합과 유럽의 가치(예를 들어 자유, 평등, 인권)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럽은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쌓고 통제하고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는 정책, 법안, 규정 등을 만들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난민들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면서 난민을 혐오하는 단어들을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은 유럽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문명화된 삶의 조건으로 “침입해서” 인간성, 성 평등과 민주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유럽 사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집단 또는 무리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에 대한 대중매체의 언어적, 이미지 전략 뿐만 아니라, 법적, 경찰에 의한 조치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국민국가적 망명법과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제네바 난민 협정의 기본 이념은 흔들리고 있으며, 이러한 난민 관련 지배 담론, 전략과 법적 조치들은 망명이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한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²¹⁾라는 사실, 즉 인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 특정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타자관이 지배 담론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은 타자를 독일 사회 질서로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이론적 구상과 실천 자체도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배양하고 연대의식을 키우기 위해 교육(학)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타자에 대한 편견과 개인들을 ‘우리’와 ‘그들’로 가르고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논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 출처: <http://amnesty.or.kr/974/> (검색일: 2016. 10. 03.).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²²⁾에서 활동하는 교육학자와 교육활동가들은 연대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중요한 논제를 강조한다.²³⁾ “적절한 삶과 노동조건에 대한 보편적 욕구뿐만 아니라 세계인구의 실제 상호의존성이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망명하는 사람들과 세계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주와 망명을 단순히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안으로 간주하는 독일 정부의 통합정책 논리의 관점과 구분되고, 사회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차이와 그 차이로부터 파생되는 ‘다름’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욕구와 이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망명과 이주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난민을 단순히 독일 사회에 적응시키고 사회 질서로 편입시키려는 사회통합정책과 환영문화를 강조하기보다 불평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이주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교육활동가의 지적 성찰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난민유입 양상과 유럽국가의 정치적 대응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조차도 위기가 은연중에 난민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연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대량 망명과 관련한 유럽의 위기는 오히려 인종주의 위기 혹은 민족주의 위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학)의 중요한 과제는 용어 사용에 내재한 인종주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구상이 충돌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한국도 다문화·다양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난민에 있어서 더 이상 외인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00년까지 총 96명의 신청자를 받았으나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가 2013년 난민법 개정 이후부터 난민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총 11,172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김현숙 2016, 16). 한국 사회에서 난민 여성의

22) 여기서 말하는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이란(rassismuskritische Perspektive) 인종주의를 사회의 극단적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로 보기보다, 일상생활 속(예를 들어 일상적 차별 단어, 순수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 독일어가 아닌 특정 언어 사용을 경시하고 거부하거나 금지하기조차 하는 학교, 학생들을 출신 국가에 의해 구분하고 선별하는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각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체제로 파악하고, 그러한 체제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인종주의 비판이란 주체의 지속적인 자기성찰로 이해할 수 있다(Leiprecht 2005, 317-345; Terkessidis 2004; Elverich 2006).

23) 출처: <http://www.aufruf-fuer-solidarische-bildung.de/> (검색일: 2016. 10. 16.).

자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진숙이 사회다양성을 인정하고자 외치는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구호를 바꾸어 ‘경기도 속의 세계’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왜냐하면 실제 경기도에서 콩고가 가지 않아도 콩고 문화, 음식, 교육제도 같은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저급한 문화’로 치부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겨레 16/04/16). 세계적 이주현상에 직면하여 교육(학)은 문화, 종교, 출신 개념을 사용하는 가운데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국제 사회의 공통의 이해(예를 들어 평등, 정의, 평화,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성, 인권)를 강조해야 한다.

난민에 대한 독일 사회의 대응방식의 고찰을 통해 교육은 기존의 교육 내용이 동질적이고 순수한 국민 정체성과 국민국가적 허구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문화 개념을 사용할 때, 인종주의를 은연중에 재생산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 2016. EU의 난민처리 문제와 시사점. 외교 116, 195-201.
- 김시홍. 2016. 요새화된 유럽과 이민 망명정책의 전망. 유럽연구 34(2), 287-313.
- 김현숙. 2016.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정책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희. 2016. 프랑스의 난민정책: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 연구 42, 27-63.
- 안병익. 2016.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독일 연구:역사·사회·문화 31, 1-33.
- 안성경 & 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13, 127-150.
- 이병렬·김희자. 2011.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8(2), 33-68.
- 이신화. 2016.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32(1), 75-104.
- 이용일. 2010. 추방, 탈출, 난민: 독일문제와 이주 (1945-1998) 역사와 세계 38, 91-111.
- 정기섭. 2009.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지원 현황 및 시사점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2), 105-134.
- 정대성. 2016. 독일 뉴라이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129, 42-77.
- 최진우. 2016.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1), 109-137.
- 한영빈. 2015. 독일의 이주통합정책 : 패러다임 전환과 성과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 8(1), 39-70.
- Elverich, G, Kalpaka, A. und Reindlmeier, K. Spurensicherung. 2006. Reflexion von Bildungsarbeit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Frankfurt/M. Unrast-Verlag.
- Hamburger, F. 2009. Abschied von der Interkulturellen Pädagogik. Plädoyer für einen Wandel sozialpädagogischer Konzepte. Beltz.
- Hügel, V. M. 2000. Asyl- und Flüchtlings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in Handbuch der Sozialen Arbeit mit Kinderflüchtlingen, WOG E.V. / Institut für soziale Arbeit E.V. (Hg.) VOTUM, 155-171.

- Klafki, W. 2007. Neue Studien zur Bildungstheorie und Didaktik. Zeitgemäß e Allgemeinbildung und kritisch-konstruktive Didaktik. 6. Auflage. Beltz.
- Leiprecht, R. 2005. Zum Umgang mit Rassismus in Schule und Unterricht. Begriffe und Ansatzpunkte. In: Leiprecht, R. und Kerber, A.(Hg.). Schule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Wochenschau Verlag.
- Mecheril, P. 2012. Die Normalität des Rassismus, Rassismus in der Sozialen Arbeit. Fachtagung in Bremen Tagungsdokumentation.
- Mecheril, P. 2004. Einführung in die Migrationspädagogik, Weinheim: Beltz.
- Terkessidis, M. 2004. Die Banalität des Rassismus. MigrantInnen zweiter Generation entwickeln eine neue Perspektive. Transcript.
- 신희완. 2016. 난민이 많은 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가 많은 것.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2412 (검색일: 2016. 09. 04.).
- 엠네스티 캠페인. 2009. ‘난민, 우리와 함께’ 난민인권을 위한 도미노 쌓기. 출처: <http://amnesty.or.kr/974/> (검색일: 2016. 10. 03.).
- 이정무. 2016. 6천5백만명 : 2015년, UN역사상 최악의 난민 발생. 출처: <http://www.vop.co.kr/A00001039778.html> (검색일: 2016. 09. 02.).
- 장성준. 2016. ‘대의’ 따라 난민 받았지만 적응 가능 대상 추려내는 독일.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70> (검색일: 2016. 10. 15.).
- Asylpaket I in Kraft: Überblick über die ab heute geltenden asylrechtlichen Änderungen. 출처: <https://www.proasyl.de/hintergrund/asylpaket-i-in-kraft-ueberblick-ueber-die-ab-heute-geltenden-asylrechtlichen-aenderungen/> (검색일: 2016. 10. 09.).
- Diehl, J. 2015. Flüchtlinge genauso kriminell wie Deutsche. 출처: <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fluechtlingskrise-bka-stellt-steigende-kriminalitaet-fest-vor-allem-von-rechts-a-1062661.html> (검색일: 2016. 10. 15.).
- Für solidarische Bildung in der globalen Migrationsgesellschaft. 출처: <http://www.auf-ruf-fuer-solidarische-bildung.de/> (검색일: 2016. 10. 16.).
- Ha, K. N. 2007. “Integration kann nicht verordnet werden.” Ohne gleiche Rechte und Selbstbestimmung keine Integration. 출처: <https://heimatkunde.boell.de/2007/11/18/integration-kann-nicht-verordnet-werden-ohne-gleiche-rechte-und-selbstbestimmung-keine> (검색일: 2016. 09. 30.).

- Pressemitteilung - #ausnahmslos-Initiator_innen kritisieren Verschärfung des Aufenthaltsgesetzes im Zuge der Sexualstrafrechtsreform, 출처: <http://ausnahmslos.org/> (검색일: 2016. 10. 08.).
- Scherr, A. 2015. Wer ist ein Flüchtling? 출처: <http://fluechtlingsforschung.net/wer-ist-ein-fluechtling/> (검색일: 2016. 10. 07.).
- Schuler, K. 2016. Viel Härte, wenig Wirkung. 출처: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6-02/asylpaket-ii-abschiebungen-familiennachzug>(검색일: 2016. 10. 15.).
- Sicherer Herkunftsstaat,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Sicherer_Herkunftsstaat (검색일: 2016. 10. 12.).
- Weniger Flüchtlinge als vermutet, 출처: <https://www.tagesschau.de/inland/maiziere-fluechtlinge-103.html> (검색일: 2016. 10. 01.).
- 한겨레 <http://www.hani.co.kr/>

● 투고일: 2016.10.30. ● 심사일: 2016.11. 1. ● 게재확정일: 2016.11.22.

A critical review and assignment of education about refugee discourse in Germany

Hong, Eunyou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ylum and migration has now become the focus of concerns of European national and supranational policy. European public discourse has mainly been centered on concepts such as security and the value of European integration create new laws about policie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and build a fence on the border for defense immigrants by using this worlds. This paper discusses the response of the German society to refugees and discusses the cases of immigrant abstinence and strengthened refugee restric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criticizing racism through the case of Cologne group sex crime cases. Germany's society response to the refugee community can be characterized in the eng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policy in European Union. However Racism and nationalism increase in Germany which has maintained a relatively generous stance on the influx of refugees from within the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refugees have been described as mainly negative image on cologne's gang rape through the media. Unlike those dominant discourses, this paper indicates that you are looking carefully at the asylum and migration phenomenon in the discourse of German society about influx refugees and informs that a critical minority point of view which play attention to racism which is problem within society also exists. so in this respect, Education analyzes racism and its social implications in the dominant discourse on refugees and immigration and all of educators and trainees has a difficult task on hand that must prepare space of education which help to critically consider stereotype about other people that reproduce racism and sexism and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that classify individuals into 'we' and 'Them'.

<Key words> refugees, Europe, Germany, racism, education